

외요세평



박상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올해 더위는 유난히 힘들고 지루했다. 그렇다고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 최고로 더웠던 것은 아니다. 기상청 기록으로는 지난 50여년 중에 2013년과 2018년 여름이 더 더웠다. 게다가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욱 요즘 더위가 유별나지는 않을 것 같다.

기상이변 이제 '새로운 일상'

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만화 심슨가족의 주인공 호머 심슨은 아들 바트에게 '올해가 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일 거라고 읊조렸다. 얼마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 바 있고,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전세계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폭염, 폭우, 홍수, 폭풍, 가뭄, 산불과 같은 극한의 기상현상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불볕더위 가신 뒤에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기후변화가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의 쇠락, 마야 문명의 소멸, 훈족과 게르만족의 대이동, 거란족, 몽골족, 바이킹 세력의 흥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향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주장도 점차 퍼지고 있다. 혹자는 올해 조금 더웠다고 문명의 명멸까지 빚대면서 유난 댄다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 나도 호들갑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근래의 기상변화가 심상치 않고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진다는 데는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호남만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원이 바닥나더니 초여름이 지나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물난리를 겪었다. 장마와 무더위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축제의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되는지...

벨기에 뢰벤대 연구를 토대로 한 OWID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은 연평균으로 1980년대 197억달러, 1990년대 698억달러, 2000년대 977억달러, 2010년대 1,710억달러로 계속 배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재해 피해액이 3.7조원, 복구액은 10.3조원에 이른다

행안부의 재난 피해액 산정에는 기온상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 수온 변화에 따른 어업과 양식업의 손해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무더위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은 또 얼마나 될까? 제임스 헨스 컬럼비아대 기후센터장에 따르면 기온

이 영상 32도로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25%, 38도를 넘으면 70%나 낮아진다고 한다. 32도를 넘는 날이 6일 이상이면 미국 자동차공장의 생산성이 8%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올 6월부터 최근까지 100일 동안 광주의 날씨를 살펴보니, 낮 최고기온 32도를 넘는 날이 36일이었고, 한 번은 14일 연속, 또 한 번은 9일 연속 32도를 웃돌았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노력

어디 이쁜인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RE100, 탄소배출 제로 100%를 달성하라는 CF100처럼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하는 환경규제에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수·광양산단의 철강·화학업체들의 경우에도 탄소저감 시설투자를 늘리고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경기가 어려운 지금, 비용 마련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 차원의 주도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환경 예산지원을 늘리는 대신,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 우리도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만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후약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기업이, 아니면 나만이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릴없이 자꾸 걱정만 된다.

사설

전라도 천년사 별책 수용 가능한가

심히 우려되는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이슈가 있다.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논란거리로 계속 남을 안이 있다. 역사왜곡과 식민사관 논란으로 발간 배포여부를 놓고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전라도 천년사' 문제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와 책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이 해소되기는커녕 대화가 막혀버리는 지경에 처해 천년사 발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천년사 편찬 예산(24억원)을 들인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발간 배포를 놓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쪽이든 수개월 전 발간 배포가 예정돼 있다가 역사왜곡과 식민사관 논란으로 지금까지 늦춰졌고 쟁점이 된 부분을 놓고 편찬위측과 시민사회단체측의 대화를 모색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꼴이다.

만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한 식민사관 관련 의견을 담아 별책으로 내고 이와 함께

천년사(34권)를 발간 배포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인가. 편찬위측은 별책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는지 자세히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천년사 사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른역사시민연대·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광복회 광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은 별책 형태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들 단체는 발간 배포를 막기 위해 아예 천년사를 모조리 사들이는 캠페인까지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년사 문제는 발간 배포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대하지만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단군조선의 축소 또는 부인, 일본서기 등 사료 인용, 마한 멸망 시기, 식민사학 방법에 의한 지명 위치 비정 문제 등을 놓고 편찬위와 시민사회단체, 역사학계의 시각이 첨예해 한국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천년사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AI 영재고 예산 전폭 지원해야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지역 안팎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AI사관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AI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중등교육 과정이 없는 탓에 전문 인재 양성 사다리가 단절된 상황이다. AI 중심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이 필수적이다.

AI 영재고는 1,038억원을 투입해 GIST 내부나 AI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등에 설립될 예정이다. 정원 150명에 AI 핵심기술기반 융합 교육을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하는 AI 인재 양성 특화학교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만큼 관계 당국과 정치

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설립 타당성, 절차 등을 협의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광주시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형태보다는 국립 형태 학교 설립을 병행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GIST 부설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강기정 시장의 AI 영재고 설립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광주 AI 선도도시와 대한민국 디지털 고도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광주에는 AI 집적단지 조성 등 인프라가 풍부해져 설립 당위성이 충분하다. 정부 적극 지원이 필수적이다. AI 영재고가 설립돼 전국적으로 디지털 인재가 몰리고 또 이를 통해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1·2단계 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무광장

(45) 연말정산 Q&A



-직장에서 퇴사해 연도 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직장)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해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연도 중 이직해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문제는.

▲근무하던 직장(A)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B)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최종 근무지(B)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보험회사서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안돼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근무지(A)와 최종 근무지(B)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최종 근무지(B)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A)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연도중 퇴사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퇴직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담당의사를 경유해 의료기관명 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를 다니기 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광주국세청 제공

독자투고

최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조 또한 비슷하다. 경비경찰의 주요 임무인 집회시위 관리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며 불법을 야기하는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침을 지켜 나가고 있다.

최근의 사회현상은 강력한 사회 이슈들이 연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다수가 모인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 행위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부드러운 강함을 이긴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유명한 아습우화인 '해와 바람'의 교훈도 있다. 바람이 세차고 강할수록 남자의 외투를 벗겨버릴 것으로 여겼으나 더욱 몸을 얼어붙게 해 외투를 꼭 붙잡게 만들어 버렸고 오히려 파스한 햇볕이 내리쬐자 스스로

외투를 벗게 하는 온화한 해의 영향력을 봤다.

이러한 교훈처럼 각종 사회이슈들이 홍수를 이뤄 집회시위 요소가 증가한 현실 속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목소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엄정대응 방식 전에 대화경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와 바람'의 교훈을 집회시위문화에 투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과 경찰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화하고 파스한 햇볕처럼 해의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한다면 우리는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문화 속에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민들이 면모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김봉기 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글로벌 시대 안보위협, 테러지원국이란?

독자투고



김덕형

무안경찰서 풍탄차안센터장 경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EU 의회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봤다.

국민들이 다소 의아할 수 있는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지정하는 용어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도의 해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 국제적 테러행위에 가담했다든지 지원 또는 방조 혐의가 있는 국가를 또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

이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미국 및 관련국들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테러지원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테러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

원조 금지, 무역제재 등의 불이익도 뒤따르게 된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통해 이들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도 국가별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에서는 테러지원국을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암살 연루 사례에서 보듯이 테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 안전국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테러단체 조직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 테러단체들은 탈레반의 전략을 모방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조직원과 자금을 확보하고 세력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대부분이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코 남의 나라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재외 국민 및 해외 여행객들은 신변안전에 특히 유념하는 한편 글로벌 테러리즘 확산 및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 속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용남 편집국장 박철홍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정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